“젊은이 찾기 힘든 고향, 벌초 맡기는게 편해요”

벌초 대행 서비스 따라가 보니

고령화에 농촌 풍속 달라지고 코로나 여파 고향 방문도 자제 친척과도 서먹해져 부탁 어려워 농협·산림조합 대행 문의 급증

추석을 앞둔 11일 오전 장성군 남면 삼태리 야산은 예초기 소리로 시끄러웠다.

장성군 황룡농협의 벌초대행단은 이날 잡초로 뒤덮인 야산 입구에 주차한 뒤 예초기·송풍기·갈퀴 등을 동원해 진입로부터 풀을 베며 앞으로 나아갔다.

묘 앞에 놓인 비석으로 확인해야 할 정도로, 사람 키 높이까지 웃자란 잡초로 뒤덮인 봉분이 대부분이었다.

묘 주변으로 가시가 돋아 있는 찔레나무가 무성한 경우도 많고 벌들도 자주 나와 쉽지 않다. 소음과 진동이 심한 예초기를 다루다가 자칫 쇳날에 돌이 닿는 경우 얼굴로 튀면 큰 부상을 입기도 한다. 이날도 작업 내내 자그마한 돌들이 튀어올랐다.

대행단 작업인부 8명은 두 팀으로 나눠 작업에 들어갔다. 장마와 무더위로 어른 허리 높이만큼 자란 풀을 깎은 지 20여분이 지나면서 봉분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벌초가 마무리됐다. 이날 이들 8명은 오전에만 12기의 벌초를 했다.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조상 묘 벌초를 농협·산림조합 등 대행업체에 맡기는 ‘벌초대행’이 크게 늘었다. 고령화와 젊은층의 탈 농촌화, 인구감소, 코로나 등이 맞물리면서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시절 기억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만날 사람이 없다보니 고향을 찾는 대신 조상 묘 벌초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평소 벌초를 맡기곤 했던 친척들도 더이상 농촌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고 젊은층은 더더욱 찾기 힘들다보니 벌초 대행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는 게 농협·산림조합측 설명이다. 코로나로 고향 방문이 쉽지 않고 방역 지침상 네 사람 이상이 모이기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쳤다.

12일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벌초대행 건수는 2019년 6062건→2020년 7938건→2021년 8월까지 837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추석을 앞두고 조합(광주 1곳·전남 21곳) 1곳 당 대행한 벌초 건수는 평균 380건이 넘는다.

벌초대행단 작업단원들은 “맡길 사람이 없는 게 벌초대행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명절 앞두고 부모님이나 조상 묘 벌초를 하지 못할 경우 고향에 사는 친척들, 또래 고향 친구들한테 부탁해 처리했던 게 더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 1970년 393만명에 달했던 인구는 지난달 기준 183만명으로 급감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남 인구의 24.0%(44만1000여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고흥의 경우 전체 인구 6만3124명 중 41.9%(2만6421명)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고령화로 노인들만 있는 고향에 조상 묘 벌초를 맡길 수 있겠냐는 얘기다. 이날 벌초대행단이 돌아다닌 장성군도 전체 인구 4만3715명 중 30.9%인 1만3503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한 작업단원은 “고향에 살던 친척들은 나이가 들어 벌초를 부탁하기 어렵고 또래 친구들은 농촌을 떠나 살다보니 맡길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땅·집을 모두 처분해 버린 도시인들이 많아 고향 땅을 빌려준 임대인에게 벌초를 맡기는 일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고향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고향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찾는 게 서먹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벌초대행 작업단원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태어나 농촌에 살아본 경험이 없다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실상 부모님과 함께 찾았던 고향에 대한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엔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끼리 날짜를 정해 벌초를 했지만 요즘엔 코로나로 4명 이상 벌초를 위해 모이는 일이 힘들어졌다.

농협은 이같은 명절 분위기를 반영, 지난 1994년부터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출향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벌초 대행 서비스를 올해부터 ‘NH농협 벌초대행’ 어플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벌초대행 비용은 1기당 8만원이 기본 요금. 하지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산 속인 경우 묘지 위치, 면적, 작업내용 등에 따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날 벌초대행을 한 김재신씨는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벌초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지만 조상 묘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중요한 것”이라며 “같은 고향 사람, 내 조상 묘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벌초대행을 맡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11일 오전 장성군 남면 삼태리 한 야산에서 장성 황룡농협의 벌초대행단이 벌초 작업을 하고있다.

‘학동 붕괴 참사’ 연관 문흥식씨 입국 조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해외 도피중 입국해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문흥식(61)씨를 상대로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철거 공정·정비기반 사업 계약을 체결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씨는 학동 붕괴 참사 관련, 전 지난 6월 13일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11일 오후 5시 40분 인천공항에 자진 귀국했다. 경찰은 도두한 문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변호사와 인터폴 등을 통해 귀국을 종용해왔다.

문씨는 선배 이모(73)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4~5차례에 걸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2곳·정비기반업체 1곳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타워크레인 점거 공사 방해 혐의 민주노총 지부장 등 징역·벌금형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광주전남건설지부 관계자 등이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광주전남건설지부 지부장 A(42)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건설지부 사무국장 B(39)씨와 C(40) 조직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광주전남건설지부 형틀·분회 관계자 3명중 1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하는가 하면, 공사현장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막는 등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임단협 체결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률이 보장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노총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건설사들과의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이 건설사를 협박, 공사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공동강요)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단속·예방 강화에도 줄지 않는 보이스피싱

광주·전남 올 815건 199억 피해 피해 최소화 할 시스템 개선 필요

경찰·금융당국의 단속·예방 강화에도 광주·전남지역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수사·처벌 강화, 피해 회복 뿐 아니라 의심되는 해외 발신번호 원천 차단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시 계양 갑)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815건(광주430건·전남 385건) 발생해 19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2년 52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 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된 뒤 매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1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158억원의 피해가 났다.

전남의 피해현황도 지속적으로 증가, 발생 건수도 지난 2012년 145건에서 지난해 406건으로 3배 가량 늘었고 피해액도 10억원(2012년)에서 66억원(2020년)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증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꾸렸지만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경찰도 지난 1년 간 테스크포스(TF)를 꾸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립선 수술 과실 병원 9300만원 지급 판결

조선대병원이 전립선 수술을 하다 요관(尿管·신장과 방광을 이어주는 관길)을 다치게 해 신장까지 들어내게 된 환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원측은 “한쪽 신장이 없다고 해 고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 전부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이은정 부장판사는 A씨가 조선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A씨에게 9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A씨가 낸 손해배상액(1억300만원) 중 위자료(3000만원)만 2000만원으로 산정했을 뿐 병원측 책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배뇨불편감을 들어 조선대병원을 찾아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과 개복 후 방광게실 제거술을 받았다가 이틀 뒤 오른쪽 요관 손상 사실이 확인돼 시행한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에도 소변 누출이 지속되면서 같은해 9월 결국 우측 신장을 잘라내야했다.

A씨는 전립선 수술을 받던 중 의사 과실로 요관을 다쳐 신장까지 들어내게 됐다며 재산상 손해 7300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 등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우측 신장 적출이 수술 중 오른쪽 요관을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라는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병원과 의사측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은 수술 중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요관이 손상됐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 주장, 입증이 전혀 없고 병원측 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병원측에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